

상속 받은 주택, 최소 2년 내 팔면 종부세 중과 안한다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예상치 못한 상속 증가 방지책
어린이집도 종부세 합산 배제**

상속받은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각 지역 등록 문화재 주택 등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소재 주택은 2년 간, 광역시(군 제외) 외 소재 주택은 3년 간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하인 경우에만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 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예기치 못

하게 취득하는 그런 주택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갑자기 주택 수가 늘어났을 경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 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만 빠진다. 세액을 산정하는 과세 표준에는 상속 주택 몫도 합산된다.

상속 주택에만 세제상 특례를 주는 것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종부세 부과에 2~3년 제한을 두되 과세 표준에는 포함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 포함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과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주택 조합 등 처분해 없앨(멸실) 예정인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없애지 않으면 종부세 합산 시 배제되지 않아 세 부담이 커진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전통 사찰 같은 종종(宗中) 등 투기 목적

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에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원, 0.6~3.0%(다주택자 1.2~6.0%) 누진세율, 세 부담 상한 150%·300% 등이 적용된다. 현재 공공 주택 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주택 조합, 공익 법인,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 등에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쓰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9~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3월 1가구 1주택자,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 등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공정위, 플랫폼 자사 우대·끼워팔기 규제

**공정거래법 심사지침 제정
네이버·구글 등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

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설 물가 잡아라'...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정부, 2000여 곳서 20~30% 할인 10대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하고 지난해 보다 공급시기 앞당겨 진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에서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성수기 할인 한도를 2배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대비 1.4배 확대하고, 작년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1월 10일~28일까지 성수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인 13만4000톤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물가는 잦은 강우, 큰 일교차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수요증가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채소와 과일류는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인 반면, 축산물은 평년 대비 공급여력은 많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불안심리와 가정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인다. 다만, 배추와 무는 한파 등 기상 영향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은 AI 발생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AI 발생 등으로 공

급 우려가 있는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활용해 최근 5년 중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

계란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 지원 등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AI 확산에 대비해 6월말까지 계란·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필요시 수입 신선탈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성수품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성수기 사용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 390억원 중 이번 설 명절까지 150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5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제주농산물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10~30% 할인 판매한다. 산림조합 숲에서 자란 임산물 할인판매와 임업진흥원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이 각각 1월21일~29일까지 10~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한우 불고기, 돼지 삼겹살 등 제주용품 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중견 연구소에 올 605억 투입... 우주 등 미래기술 지원

산업부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60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과제로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ATC+)'의 2022년도 신규 과제 지원계획(188억원 내외)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오는 4월까지 2022년도 신규과제 수행 기관을 모집한 후, 45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45개 신규과제 총 예산은 188억원이며, 선정과제에 대해서 매년 4~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가 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년간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과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우주 분야 신기

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분야 이외에도 저탄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선정된 93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17억원이 지원되는 등 올해 사업을 통해 지원될 총 지원예산은 138개 과제 대상 605억원이다.

올해 신규과제 상세 지원 요건과 방법, 선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1월7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